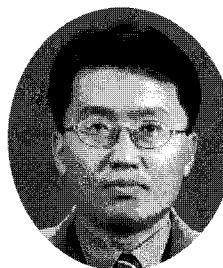


국제 규범의 농업정책 및 협상결과 수용여건 만들어야

큰폭 농업보조금 감축·시장개방 요구로 선·후진국간 입장 차이 커
농업인·소비자·관련기관·학계 등 힘 모으면 의외성과 얻을수 있어

세계무역기구(WTO)는 1999년 12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를 통해 새로운 라운드 출범을 시도하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모인 노동, 환경, 농업단체들의 시위와 개도국들의 반발 등으로 아직 뉴라운드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서비스와 함께 이미 UR 협상 당시 올해부터 협상 재개가 합의된 자동협상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2000년 3월부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농산물 협상은 회원국들의 지난 UR 농업협정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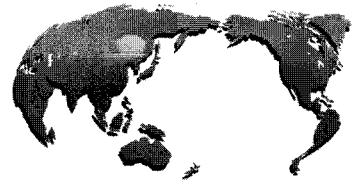


임정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행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일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WTO 농업위원회를 전후로 2~3일간 별도의 시간을 내어 특별 회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농업협상은 99년 3

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2차 특별회의가 6월 말, 그리고 제3차 특별회의가 9월 말에 개최된 바 있으며 제4차 특별회의가 11월 중순에 개최된 바 있다.

WTO는 가능하면 빨리 회원국들에게 협상의 내용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후 연속되는 특별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협상을 위한 골격(Modality)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향후 협상의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년 중에 관세와 보조금 감축방법을 비롯한 국영무역,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제도, 특별긴급관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그리고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이나 다원적 기능과 같이 UR 협상이행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된 쟁점에 관한 각국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순수입국, 협상여건 어려울 듯

차기 농산물 협상의 골격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된 특별회의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케언즈 그룹, 쿠바 등 11개 개도국, 아세안국가, 동구 유럽의 시장경제이행국, 우리나라 등 28개국이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 등을 각각 소개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로 협상쟁점별로 우리의 기본입장을 담은 독자적 제안서를 조

만간(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 WTO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협상진행 상황을 요약해 보면 우선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케언즈 그룹은 기존에 예상되던 바와 같이 협상쟁점별로 가능한 큰 폭의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조금감축을 목표로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한 협상진행을 시도한 반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 주장그룹은 차기 협상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고려와 함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추진을 강조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 국가와 모리셔스 등 일부 수입개도국들이 종전과는 달리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있어 기존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주장그룹은 다소 확대된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케언즈 그룹의 일원인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비보조수출국 그룹의 입장과 달리 식량안보는 무역자유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쌀의 경우 국제교역량이 미미하여 무역에만 의존할 수 없고 따라서 무역자유화는 추진해야 하지만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이 WTO 규범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고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분야에서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을 고무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WTO 체제에서 진행되는 농산물 협상의 기본 목표가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의 구축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 나라의 협상여건은 아직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 끌어내기 위해 올해부터 적극 나설 전망

앞으로의 협상진행 양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급진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려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새로 출범할 뉴라운드의 틀안에서 농산물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가급적 협상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수입국간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UR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대폭적인 농업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들은 각국의 특수한 농업여건과 농업이 가지는 비교역적 기능 혹은 다원적 기능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보조금 감축과 단계적 시장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국제협상의 장에서 더 이상 선진국들의 둘러리로 머물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자 하는 개도국과 기존의 협상 주도세력인 선진국간의 대립 양상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지난 UR 농산물 협상의 이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가 선진국들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겼기 때문에 WTO 출범 이후 오히려 개도국들의 농업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기회가 별로 증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다 확대되고 실효성 있는 개도국 우대조치가 차기 협상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이 처한 상이한 농업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선·후진국간, 그리고 농산물 수출입국간에 많은 분야에서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금명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특별한 결론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올해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여 각국 제안서를 토대로 협상 골격을 마련한 후 본격적인 결론 도출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수출국 주장, 국내농업 파급효과 를 것

지금까지 차기 WTO 농산물 협상의 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국 제안서와 최근 협상 동향을 고려할 때, 차기 농산물협상에서 보조금과 함께 관세인하는 중요한 협상쟁점이 될 것이 확실하

다. 왜냐하면 지난 UR 협상 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관세제도를 운용함으로써 UR 농업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장접근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하에,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관세인하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욱이 UR 관세화 이행에 의해 새로이 설정된 농산물 관세는 선진국과 수출국의 경우에도 200% 이상인 품목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가와 품목간에 나타나는 관세불균형 (Tariff imbalance) 혹은 관세격차 (Tariff dispersion) 및 가공도에 따른 누진관세(Tariff escalation)체제는 농산물 교역 확대의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은 UR 이행결과 야기된 국가 및 품목간 관세불균형, 가공도별 관세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양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관세의 최고한도 설정이나 대폭 감축방식 등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비한 협상 전략 수립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차기협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논의될 뿐만 아니라,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UR 협상결과 이상으

로 국내농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농민·소비자 등 모두 힘 모아야

따라서 우리 나라는 우선 대내적으로 이러한 국제 규범 및 무역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차기 협상에서 도출될 협상결과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수출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급격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되는 협상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등 주요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수입국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협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무역협상의 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을 가능한 많이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주장하는 그룹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과 더불어 농민, 소비자, 농업관련 기관, 학계 등 국민 모두가 총체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농약정보**